2006년 한국 경제의 희망 포인트

조홍래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

새해 한국 경제는 희망을 조금 가져도 될 듯하다. 무엇보다도 2년이 넘도록 극도로 위축되었던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이 조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수출은 지난 2005년과 비슷한 신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정자본형성 부문 중에서 그 동안 오래 잠들어 있던 설비투자가 모처럼 기지개를 펴면서 10%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각 부문별로 비교적 균형 잡힌 성장세가 구현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지난 2년여 동안의 국민계정 성적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민간 소비가 더 이상 전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민간의 소비 지출은 소득 중에서도 항상 소득(恒常 所得: permanent income)의 함수이며 여기에 가용 유동성이 변수로 등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성 흐름, 즉 현금 흐름이 막히면 적절한 소비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2003년 초 이후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속히 감소한 것도 항상 소득의 급속한 감소에 연유하기 보다는 가용 유동성의 급속한 감소 때문이었다. 다름 아니라 과도한 가계 부채를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 소비가 회생의 조짐을 보인다면 그 이유는 가계 부문의 부채 조정이 서서히 종료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신용 카드를 비롯한 가계 부채 문제가 불거져 나온 지 2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일반 소비자들은 부채의 조정, 즉 허리띠를 조르면서 가계 빚을 갚아나가는 고통스런 구조조정 과정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의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노력에 비하면 훨씬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경제 전체로는 비록 2005년 중반부터 서서히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유동성 여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소득 계층별로 가용 유동성 상황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수출 증가는 2006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 경기가 견조하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유럽 지역의 경기 전망도 좋다. 여기에 그 동안 한국 수출의 주력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및 동남아의 범(汎) 중화권에 대한 수출은 전혀 이상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재연되면서 일부 품목의 일부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잠식 현상이 우려되지만 전체 수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 유가는 2005년의 고점 대비하여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전체 대외거래 부문은 2005년 수준에서 조금 악화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한편, 설비투자의 확대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 목격될 것이다.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설비 가동률의 상승, 경쟁력 열위 부문의 부진 지속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민간 소비 증가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설비투자가 신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병술년(丙戌年) 새해의 한국 경제는 각 부문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여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이다.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들 수 있다. 지난 90년대와는 달리 한국의 기업과 금융 기관, 나아가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극복하려는 체질이 습득되어 조금씩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은 웬만한 원가 상승 압력을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극복하고 있다. 금융 기관은 가계 부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다. 개별 소비자들도 아픈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값진 교훈을 터득했다. 또 다른 배경은 제반 경제 활동이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개발연대의 경험에서 보면 정치권의 불안은 곧잘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곤 했다. 심지어 심각한 정경유착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경제계가 한꺼번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제고된 요즘, 어지간한 정치권 뉴스는 더 이상 경제 흐름의 기조를 뒤바꾸지 못한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내수 부문의 곳곳이 IT 혁명의 결과로 고부가가치화로 탈바꿈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희망이 보이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과제는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전체 그림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양극화 문제는 남아 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저해 요인이며, 산업 양극화는 국가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지속 성장을 각로 막는 걸림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년 이내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계 부채의 해결 과정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은 자력으로는 결코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그런 예이다. 한편, 당장 시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 다름 아니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지속적인 개발이다.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적절한 타이밍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적 자본의 개발을 통하여 전 산업에 걸친 끊임없는 개혁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해야만 앞으로 10년 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인적 자본의 확충 문제는 교육 정책, 노동 정책, 이민 정책 등에서 개별 기업의 인사 전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이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이 문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고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청사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단언컨대 인적 자본의 확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장기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진정한 선진화도 요원하다. 병술년 새해에는 이런 중장기 이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어 한국 경제가 희망의 불씨를 계속 키워가기를 기대해 본다.